대학입학전형 단순화 대안 마련 국회 토론회 (2012. 12. 6.)

대입전형 단순화와 새로운 대입전형 공적 관리기구의 구체적 대안을 제안한다

주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주최 : 강은희 국회의원 (새누리당)
박홍근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대학입학전형 단순화 대안 마련 국회 토론회

대입전형 단순화와 새로운 대입전형 공적관리기구의 구체적 대안을 제안한다

너무 복잡한 대학입시 전형제도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부모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대입전형제도를 단순하게 만들고 입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일을 위해, 정치가 나서야하겠습니다. 모두가 문제라 하지만 시원한 답을 찾지 못하는 이때, 좋은 대안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하겠습니다.

일시 12월 6일 목요일 오후 2시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발제 및 토론자

발제
- 김승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 김승민(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상임변호사)

토론
- 송선진(교육과학기술부 대입제도과장)
- 박성열(건국대학교 입학처장)
- 임진택(경희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
- 이성권(서울진학지도협의회 회장, 대진고 교사)
- 이범(서울교육청 전 정책보좌관, 교육평론가)

주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주최 강은희 국회의원(새누리당), 박홍근 국회의원(민주통합당)

머리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의 강은희(새누리당) 국회의원, 박홍근(민주통합당) 국회의원과 함께 12월 6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입전형 단순화와 새로운 대입전형 공적 관리기구의 구체적 대안을 제안한다'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들어, 대입제도 개선과 관련된 가장 큰 화두는 단연 '대입전형의 단순화'입니다. 지나치게 다양하고 복잡한 전형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면서, 그동안 대입제도 개선의 큰 흐름이었던 대입전형 다양성 확대 경향과는 달리 대입전형을 획기적으로 단순화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요구를 반영하듯 대선에 출마한 각 후보들 역시 앞 다투어 대입전형 단순화 관련 공약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대입전형 단순화가 대선 교육공약의 주요 이슈가 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의 복잡한 대입전형을 단순화 시켜야한다는 방향성과 원칙에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선후보를 포함하여 아직까지 대입전형 단순화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대입전형 개선 관련 문제를 선도적으로 제기해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의 강은희(새누리당)박홍근(민주통합당) 국회의원과 함께 대입전형 단순화의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대입전형 공적 관리기구의 설치를 제안하는 토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은 물론이고 대안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법률(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행정규칙 등)의 개정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입전형 단순화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수준이 한 단계 발전하고, 정치권과 대학, 고교, 시민사회 등이 함께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고 실행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2. 12. 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목차

■ 제1발제: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 1
"대입전형 단순화, 새로운 대입전형 공적 관리기구의 대안"

■ 제2발제: 김승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상임변호사) ····· 33
"대입전형 단순화, 새로운 대입전형 공적 관리기구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제1논찬: 송선진 (교육과학기술부 대입제도과장) ····· 43
"대입전형 단순화와 새로운 대입전형 공적 관리기구의 구체적 대안 제안에 대한 토론"

■ 제2논찬: 박성열 (건국대학교 입학처장) ····· 45
"대입전형 단순화에 대한 의견"

■ 제3논찬: 임진택 (경희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 ····· 47
"대입전형 단순화와 새로운 대입전형 공적 관리기구의 구체적 대안 제안에 대한 토론"

■ 제4논찬: 이성권 (서울진학지도협의회 회장, 서울 대진고등학교 교사) ····· 53
" '대입전형 단순화, 새로운 대입전형 공적 관리기구가 대안이다' 발제에 대한 토론"

■ 제5논찬: 이 범 (서울교육청 전 정책보좌관, 교육평론가) ····· 63
"대입전형 단순화와 새로운 대입전형 공적 관리기구의 구체적 대안 제안에 대한 토론"

▌제1발제

대입전형 단순화,
새로운 대입전형 공적 관리기구의 대안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Ⅰ. 들어가며 : “구체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들어, 대입제도 개선과 관련된 가장 큰 화두는 단연 ‘대입전형의 단순화’이다. 지나치게 복잡한 전형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커지면서, 그동안 대입제도 개선의 큰 흐름이었던 대입전형 다양성 확대 경향과는 달리 대입전형을 획기적으로 단순화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요구를 반영하듯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각 후보들 역시 앞 다투어 대입전형 단순화 관련 공약을 내놓기도 하였다.

대입전형 단순화가 대선 교육공약의 주요 이슈가 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의 복잡한 대입전형을 단순화 시켜야한다는 방향성과 원칙에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선후보를 포함하여 아직까지 대입전형 단순화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대입전형 관련 문제를 선도적으로 제기해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의 강은희(새누리당)·박홍근(민주통합당) 국회의원과 함께 대입전형 단순화의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대입전형 공적 관리기구의 설치를 제안하는 토론회를 갖게 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되는 구체적인 대안의 내용과 토론을 통해 대입전형 단순화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수준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Ⅱ.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은 각 대학의 입학전형과 현재 대교협이 맡고 있는 대입전형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문제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가. 대입전형의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대입전형으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를 비롯한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크게 세 가지(복잡성, 고난이도, 예측불가능)이다.

첫째, 전형이 지나치게 다양하고 복잡하다.
둘째, 논술을 비롯한 대학별고사와 대학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등이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대비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게 어렵다.
셋째, 대학별 모집요강이 너무 늦게 발표가 되고, 발표된 이후에도 수시로 변경된다.

1) 지나치게 다양하고 복잡한 전형

과연 전형이 지나치게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의미는 정확히 무엇인가? 전형이 복잡하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전형의 개수가 무려 3,000개를 넘는다는 점을 주로 근거로 사용한다. 하지만 대학이나 입시관계자들은 이런 지적에 반론을 제기한다. 전형의 명칭이 3,000개가 넘는 것은 맞지만, 전형을 주요 전형요소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면 논술 전형, 학생부 전형, 적성평가 전형, 특기자 전형, 수능 전형 등 5~6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물론 현재의 대입전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것은 분명한 진실이다. 하지만 복잡하다는 의미를 좀 더 정교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전형의 개수가 3,000개가 넘는다는 지적은 문제를 제기하는 출발점으로서는 유용하지만 대입전형 단순화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다.

입시를 치러본 수험생과 학부모, 이를 안내하고 지도하는 교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전형의 복잡성 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수험생 입장에서 대입을 위해 준비해야할 전형요소가 너무 많다. 기본적으로 수능과 내신을 준비해야하고 이외에도 논술을 비롯한 대학별고사, 입학사정관 전형 대비를 위한 다양한 스펙자료 등 수험생이 준비해야할 전형요소는 끝이 없다. 과거에 수험생들은 수능, 내신, 논술을 동시에 대비해야하는 상황을 일컬어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른 적이 있다. 지금은 '죽음의 트라이앵글'은 고사하고 '죽음의 펜타곤, 헥사곤' 아니 그 이상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둘째, 전체적으로 전형요소가 많더라도 개별 전형에 포함되는 전형요소는 단순해야하는데, 이마저도 너무 많고 전형에 따라 전형요소를 조합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다양하고 복잡하다. 다시 말해, 논술 전형이 실상은 논술만 잘한다고 붙을 수 있는 전형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 전형요소 간 반영비율이나 방법까지 고려하면 전형은 더욱 복잡해진다.

셋째, 전형명칭만 가지고서는 도대체 어떤 전형인지 도무지 짐작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런 전형명칭이 3,000개가 넘는다.

전형의 복잡성 문제는 단순히 전형의 개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지나치게 준비해야할 것이 많은 전형요소

현재 대학이 대입전형에서 활용하는 전형요소는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별고사, 기타 전형요소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전형의 복잡성과 관련하여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학별고사와 기타 전형요소이다. 대학별고사와 기타 전형요소는 각각 다시 다양한 요소로 세분화되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2개의 전형요소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게 된다.

□ 대학별고사: 논술고사, 면접/구술고사, 적성검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신체검사 등 □ 기타 전형요소: 자기소개서(지원동기, 학업계획 포함), 교과 외 활동상황, 개인활동이력철, 추천서, 기타 대학의 장이 전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등 (2013학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p14-1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전형기본사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선 대학별고사에는 논술을 비롯하여

면접 및 구술고사, 적성검사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게다가 각 대학이 실시하는 면접 및 구술고사는 어떤 통일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마다, 전형마다 서로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기본적인 사항만을 확인하는 전통적인 인성면접도 있지만 교과지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물어보는 사실상 본고사와 같은 구술면접시험이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1].

특히, 최근 들어 입학사정관 전형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대학별고사는 마치 기업마다 각자가 개발한 방식으로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것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에 제시한 <표 1>은 서울의 어느 대학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비롯한 대학별고사에서 실시하는 평가 방식을 예로 든 것이다. 이외에도 다른 대학이 실시하는 대학별고사를 살펴보면, 강의 시청 후 리포트 작성, 업적내용 발표 및 질의응답, 주제토론, 법률의견서 작성 등 평가 방식이 갈수록 다양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각각의 방식에 맞추어 준비를 하는 것은 고사하고 각 전형의 대학별고사 평가 방식을 파악하다 이미 지쳐버리게 될 정도이다.

<표 1> 서울 모 대학 대학별고사 평가 방식[2]

과제 유형	면접 절차
심층상황지문형	주어진 시간 동안 제시된 지문을 읽고 과제를 수행. 과제는 지문에 나타난 갈등상황이나 문제상황을 인식하고, 자신만의 논리와 가치관 등을 적용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임. 지문의 상황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제시된 정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결과를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
에세이형	제시된 주제에 대하여 일정 분량의 에세이를 주어진 시간 내에 작성. 면접에서는 작성된 에세이에 대하여 면접관과의 질의응답 및 토론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원자의 인문적 역량을 평가.
수학과학문제풀이형	주어진 시간 동안 제시된 수학과학문제를 풀이. 면접에서는 문제풀이의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면접관과 질의응답 및 토론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원자의 수학과학 역량을 평가.

1) 구술면접시험은 대학마다 시행방식이 조금씩 다르고 논술과는 달리 기출문제조차도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준비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2) 이 대학은 논술고사를 별도로 시행한다.

대학별고사와 함께 대입전형기본사항에 '기타 전형요소'로 분류되어 있는 사항 역시 수험생이 준비해야할 전형요소를 늘리는 주범이다. 각 대학은 학생부,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 이외에도 다양한 소위 스펙자료(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공인외국어인증시험과 경시대회를 비롯해 교과와 관련된 각종 수상실적, 동아리/봉사/체험 활동 관련 증명 서류 등 사실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형요소는 경우에 따라 무한정 늘어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런 경향은 입학사정관 전형이 도입·확대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특기자 전형을 중심으로 공인외국어성적이나 경시대회 수상실적이 주로 포함이 되었고, 이는 일반고 학생보다는 대체의 경우 특목고 학생들이 준비하는 실적 관련 자료들이었다. 그러나 입학사정관 전형이 확대되면서 양상은 변하였다. 이제는 일반고 학생들도 입학사정관 전형을 대비하여 공인외국어성적이나 수상실적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활동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 분주해진 것이다. 일선 고교에서는 상위권 학생을 중심으로 전공 동아리 활동을 의무적으로 시키고, 관련 논문을 한두 개씩 준비하도록 하는 것은 이제 기본이 되었다. 여기에 취미 관련 동아리, 각종 체험활동과 봉사활동까지, 학생들은 기존의 수능과 내신, 대학별고사 준비 이외에도 이제 다양한 스펙을 마련하기 위하여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추가로 쏟아 붓고 있는 것이다[3].

□ 개별 전형에 포함되는 전형요소의 복잡성

현재 수시와 정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입전형을 주요 전형요소를 중심으로 분류하면, 논술 전형, 학생부 전형, 적성평가 전형, 특기자 전형, 수능 전형[4]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주요 전형요소가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 입학전형에서 한 가지 전형요소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막상 모집요강을 살펴보면 최소한 3~4개의 전형요소를 동시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같은 전형요소를 반영하더라도 전형요소 간 반영비중과 반영방법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각 전형에서 반영하고 있는 모든 전형요소를 대비해야할 뿐 아니라 반영비중과 반영방법 등을 살펴

3)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갈릴 수 있다. 하지만 정규교육과정과는 무관하게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은 분명하며 입학사정관제의 원래 취지를 살리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과 수험생 및 학부모가 느끼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대안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4) 입학사정관 전형은 전형요소가 아니라, 전형 과정에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전형을 의미한다. 따라서 입학사정관 전형은 학생부 중심 전형과 특기자 전형 중 일부에 흩어져서 분포되어있다.

어떤 전형이 자신에게 유리한 지를 꼼꼼히 따져봐야만 한다.

예를 들어, 논술 전형의 경우 말은 논술 전형이지만 논술 이외에 학생부를 함께 반영하고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서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 중 상당수는 수능을 반영할 때, 일반선발에 적용하는 수능 최저학력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걸고 우선선발을 실시하고 있다[5]. 심지어 고대의 경우에는 2013학년도 입시에서 논술, 학생부, 수능성적(우선선발/일반선발) 이외에 면접까지 추가하려고 시도한 바도 있다[6].

이러한 경향은 비단 논술 전형만이 아니라 다른 전형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형이 복잡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측의 말처럼 주요 전형요소를 중심으로만 따지면 전형이 5~6개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수험생이 체감하는 복잡함의 정도는 훨씬 심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대략적으로 정리한 것이 다음에 제시한 <표 2>이다.

<표 2> 대입전형의 구분과 전형요소

		학생부 (교과)	학생부 (비교과)	자소서 추천서	학생부 이외 서류 (실적)	면접			적성 검사	논술	수능
						일반	심층	구술 시험			
수시	논술 중심 전형	○								●	●
	특기자 전형	○	○		●			●			
	적성평가 중심 전형	○							●		○
	학생부 중심 전형	●	◎	◎	◎	○	◎				◎
정시	수능 중심 전형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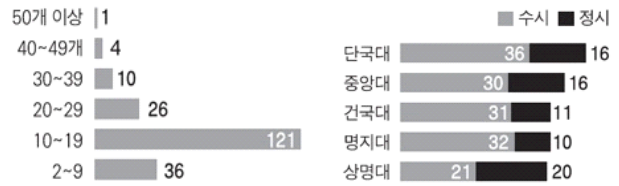
주1) 합격에 미치는 영향과 수험생 부담 정도(● : 매우 높음, ◎ : 높음, ○ : 높지 않음)
주2) 세부 전형요소는 각 대학의 전형에 따라 일부만 포함 되거나 모두 포함이 될 수 있으며, 합격에 미치는 영향과 수험생 부담 정도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

5) 이런 경우에는 논술보다 오히려 수능이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상 논술 전형이라고 할 수도 없다.
6) 이는 대교협이 변경사항 신청을 불허하면서 무산되었다. 하지만 불허 이유가 너무 뒤늦게 모집요강을 변경하면 안 된다는 이유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면접을 추가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 전형명칭의 복잡성과 모호함

전형명칭의 복잡성은 전형의 복잡함에 대해 문제제기가 될 때 가장 많이 지적이 된 부분이다. 실제로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 198개의 대입전형 개수는 3,18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2011학년도(3,789개)와 2012학년도(3,344개)보다 다소 줄어든 것이 이 정도이다. 3,186개 전형 중 66.1%인 2,105개가 수시모집이고, 나머지 33.9%(1,081개)는 정시모집에서 실시되는 전형이었다. 대학별 평균 전형 수는 16개이며, 전형이 가장 많은 학교는 단국대로 수시모집 36개, 정시모집 16개를 합하여 총 52개에 달했다. 이어 중앙대 46개, 건국대·명지대 42개, 상명대 41개 순이었다.

<그림 1> 대학별 입학전형 개수와 전형 수 많은 상위 5개 대학 (단위: 개)



자료 : 민병주 국회의원실

전형의 개수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전형의 명칭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주요 대학의 전형명칭을 살펴보면, OKU 미래인재, 알바트로스, 다빈치형 인재, 네오르네상스, UOS 포텐셜, 두드림(Do Dream) 특성화, SSU 참사랑인재, 스테파노, ACE 전형 등 그야말로 다양하고 명칭만으로는 무슨 전형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런 경향은 특히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두드러진다.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전형의 명칭만 보고서는 전형에서 평가하는 주요 전형요소가 무엇인지, 주요한 특징이 무엇인지 등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전형의 내용 파악부터 큰 부담이 되는 것이다.

2) 학교교육과정으로 대비가 어려운 대학별고사와 서류제출 요구

전형의 복잡함은 전형과 전형요소의 개수, 전형요소와 전형방법의 복잡함 등 단지 양

(量)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대학이 활용하는 전형요소 중에는 학교교육과정만 충실히 해서는 도저히 대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쁜' 전형요소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전형요소에는 논술, 구술면접시험과 같은 대학별고사와 공인인증시험성적,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을 비롯한 스펙자료 제출 요구 등이 대표적이다[7].

□ 논술 전형의 현황 및 문제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 8월 서울 시내 주요 10개 대학의 2012학년도 수리논술 84문항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전체 84문항 중에 무려 54.8%인 46문항이 고교의 교육과정을 벗어나 대학 교육과정 수준에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84문항 전체가 정답과 풀이과정을 요구하는 본고사 방식으로 출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2012년 세계 수학교육 대회 교사연수에 참가한 고교 수학교사 1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2. 8)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94%의 교사가 학교 수업만으로는 현재의 수리논술 시험을 대비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3> 2012학년도 주요 10개 대학 수리논술 문항 분석결과

대학	전형	대학 내용 문항수/총문항	대학별 총 분석 문항수/총문항	대학 내용 출제 비율
경희대	수시2차(토)	3 / 3	3 / 6	50%
	수시2차(일)	0 / 3		
고려대	수시(오전)	1 / 5	4 / 11	36%
	수시(오후)	3 / 6		
서강대	화공, 컴공	8 / 8	11 / 14	79%
	자연, 전자, 기계	3 / 6		

7) 이와 같이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나쁜' 전형요소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논술 전형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 분석자료 발표 등을 통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이러한 활동의 성과로 이번 대선에서 각 당의 후보들은 공히 관련된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서울대	정시	4 / 4	4 / 4	100%
서울 시립대	자연A형	4 / 8	4 / 16	25%
	자연B형	0 / 8		
성균관대	수시(자연1)	0 / 4	2 / 8	25%
	수시(자연2)	2 / 4		
연세대	수시	4 / 4	4 / 4	100%
이화여대	수시	0 / 3	0 / 3	0%
중앙대	수시2차(자연1)	1 / 3	1 / 5	20%
	수시2차(자연2)	0 / 2		
한양대	수시(오전)	6 / 6	13 / 13	100%
	수시(오후)	7 / 7		
총		**84**	**46 / 84**	**54.8%**

이런 상황은 자연계 논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하기는 하지만 인문계 논술에서도 별다르지 않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서울 주요 11개 대학의 2012학년도 인문계 논술고사의 제시문과 논제에 대한 전수 분석(총 29개 시험, 총 제시문 수 173개, 총 논제 수 87개)을 실시한 바에 따르면, 각 대학의 인문계 논술고사에서도 역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전 정부에서는 '논술고사 가이드라인'(교육인적자원부, 2005)을 통해 금지되었던 영어 제시문이 출제된 학교가 총 4곳(경희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한국외대)이었으며, 수학 문제를 인문계 논술에서 출제한 학교도 총 5곳(경희대, 고려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에 이르렀다. 또한 우리말 제시문에서도 대학의 전공 수준에서나 접할 수 있는 지나치게 어려운 제시문이 출제된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였다.

서울 주요 11개 대학을 기준으로, 이러한 논술 전형을 통해 각 대학이 선발하는 인원은 2013학년도 전체 수시 모집인원의 40.8%에 달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 2013학년도 주요 11개 대학 수시모집 전체인원 대비 논술 모집인원 비중

대학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평균
비중(%)	45.9	47.4	44.8	정시	24.6	44.8	43.2	25.9	37.7	43.4	50.6	40.83

□ 구술면접시험과 학생부 이외 서류 제출 요구의 현황 및 문제점

학교교육과정을 벗어나서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전형요소는 논술 시험만이 아니다.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구술면접시험을 비롯한 면접고사와 특기자 전형, 입학사정관 전형 등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에서도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논술 문항분석에 이어 지난 10월에는 박홍근 국회의원실과 함께 서울대 자연계 구술면접시험 문항에 대한 분석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총 57문항 중 50.9%인 29문항이 역시 대학 교육과정에서 출제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사형 문항 출제 비율은 80.7%였다. 서울대 이외에 특기자 전형을 중심으로 구술면접시험을 시행하는 다른 주요 대학에 대해서도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대학의 자료 제출 거부로 분석을 실시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기출문제 공개는 물론이고 자료 제출조차 거부하고 있는 대학의 행태를 볼 때,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표 5> 2012학년도 서울대 자연계 구술면접시험 문항 분석결과

과목	학부	대학 교과 수준 문항수/총문항	대학 교과 수준 문항수/총문항	대학 내용 출제 비율
수학	자연과학대학	3 / 4	10 / 11	90.9 %
	공과대학	7 / 7		
물리	간호/농업생명과학/생활과학대학	3 / 6	6 / 12	50 %
	자연과학/공과/사범대학	3 / 6		
화학	농업생명과학대학	2 / 6	3 / 12	25 %
	자연과학/공과대학	1 / 6		

생물	농업생명과학/사범대학	4 / 7	9 / 14	64.3 %
	자연과학대학	5 / 7		
지구과학	자연과학대학	1 / 8	1 / 8	12.5%
총		29 / 57	29 / 57	50.9%

각 대학이 특기자 전형 등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들 전형에서는 주로 인문계의 경우 공인외국어인증시험 성적, 자연계의 경우 수학/과학 경시대회를 비롯한 교과 수상실적 등의 서류를 주요한 전형요소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비록 특목고 학생일지라도 필연적으로 강도 높은 사교육에 아주 이른 시기부터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다음 <표 6>은 2013학년도 주요 15개 대학 특기자 전형의 전형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모든 대학에서 학생부 이외의 스펙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표 6> 2013학년도 주요 15개 대학 특기자 전형의 전형방법

대학	전형명 (모집계열)	전형방법	
		1단계	2단계
건국대	국제화(유형1)	공인어학성적 (60%) + 학생부 (40%)	
	국제화(유형2)	공인어학성적(100%) 5배수 선발	공인어학성적(40%) + 학업적성면접(60%)
경희대	특기자:외국어	해당 외국어성적(100%) 3배수 선발	외국어성적(60%) + 영어면접(40%)
고려대	국제	서류(100%) 3~5배수 선발	1단계 성적(60%) + 영어면접 혹은 심층면접(40%)
	과학	서류(100%) 3~5배수 선발	1단계 성적(60%) + 심층면접(40%)
동국대	전공재능우수자 (어학전형)	외국어성적(100%) 5배수 선발	1단계 성적(70%) + 심층면접 (30%)
서강대	알바트로스(인문)	영어에세이(100%) 3~5배수 선발	1단계 성적(80%) + 서류(20%)
	알바트로스(자연)	서류(100%) 3~5배수 선발	1단계 성적(60%) + 자연과학 및 공학 관련 분야 국어 지문 활용 심층면접(40%)

서울대	일반전형	서류(100%) 1.5~3배수 선발	1단계 성적(50%) + 면접·구술(50%) : 사범대학제외 1단계 성적(50%) + 면접·구술(30%) + 교직적성인성검사(20%) : 사범대학
서울시립대	글로벌리더	학생부(40%) + 특기성적(60%) 5배수 선발	1단계 성적(30%) + 특기재평가(70%)
성균관대	특기자(인문)	(일괄합산) 학생부(교과)(60%) + 서류(40%)	
	특기자(자연)	(일괄합산) 서류(70%) + 수학/과학 사고력평가(30%)	
숙명여대	외국어우수자	외국어성적(80%) + 서류(20%)	1단계 성적(60%) + 면접·구술(40%)
연세대	UD/ASD/TAD	서류(100%) 일정비율 우선선발 후, 일정배수 선발	1단계 성적(60%) + 영어면접(40%)
	과학인재	서류(100%) 30% 내외 우선선발 후, 일정배수 선발	1단계 성적(60%) + 수학/과학 구술시험(40%)
이화여대	인문계열	서류(100%) 4배수 내외선발	서류(80%) + 구술·면접(20%)
	국제학부	서류(100%) 4배수 내외 선발	서류(60%) + 영어면접(40%)
중앙대	과학인재	과학영재형: 수리과학능력평가(100%) 과학중점형: 수리과학능력평가(70%) + 학생부(30%)	
	글로벌리더	유형 1: 영어에세이(100%) 유형 2: 영어에세이(80%) 혹은 해당 외국어 에세이(80%) + 학생부 교과(20%)	
한국외대	글로벌리더	영어, 외국어: 어학시험변환점수(100%) + 외국어 에세이(30%) 교육과정연계: 학생부(30%) + 외국어 에세이(70%)	
한양대	글로벌한양	(일괄합산) 공인어학성적(50%) + 논술(50%)	
	한양우수과학인	학생부(교과)(20%) + 서류평가(20%) + 수리사고평가(60%)	

그리고 이런 특기자 전형이 주요 대학 입학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학마다 편차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예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3학년도 주요 11개 대학 수시모집에서 이와 같은 특기자 전형의 선발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2013학년도 주요 11개 대학 수시모집 전체인원 대비 특기자 전형 모집인원 비중

대학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평균
비중(%)	4.1	22.6	15.8	69.9	4.4	20.4	20.2	21.2	17.9	18.8	13.8	20.83

주) 서울대의 경우 2013학년도 입학전형부터 명칭을 특기자 전형에서 일반전형으로 변경하였으며, 다른 대학에 비해 서류보다는 구술면접시험의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서류 제출을 마찬가지로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서류 제출 요구는 특기자 전형뿐만 아니라 다른 전형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대는 일반전형(작년까지 특기자 전형)은 물론이고 지역균형선발의 모집요강에서도 평가서류 목록이 '학생부, 추천서, 자기소개서, 각종 증빙서류 등 제출된 모든 서류'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출서류 양식에서 10개까지 기록이 가능한 '증빙서류 목차'를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공인인증시험성적과 수상실적 등 학생부 이외 서류(실적)가 평가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다. 또한 성균관대는 자기소개서 양식 안에 교내외 대표적인 실적 10개를 적도록 하면서, 예시로서 경시대회와 어학성적 등을 들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학생부 이외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다른 대학 입학전형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3) 예측이 어려운 각 대학의 모집요강 발표와 변경

지금까지 지적한 문제들 이외에도 수험생의 혼란과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원인이 있다. 가뜩이나 다양하고 복잡한 전형이 그나마도 늦게 발표되고, 발표된 이후에도 제대로 유지되지 않고 수시로 변경된다는 점이다. 즉,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예측이 가능한 입시 대비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르면 큰 틀에서 대입전형의 방향과 원칙을 규정하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수험생이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을 마치는 시점(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이 돼서야 확정·발표가 되고 있다. 또한 수험생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각 대학의 구체적인 모집요강은 12월이 돼서야(매 입학연

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3개월 전) 비로소 공표가 된다. 실질적으로 수시의 경우 6개월, 정시의 경우 1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이 상황에서 발표가 되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그마저도 수시로 변경이 된다는 사실이다. 금년에도 각 대학의 모집요강은 작년 말 대입전형시행계획이 대교협을 통해 확정 발표된 이후에도 변화를 거듭하였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박홍근 국회의원실과 같이 이런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각 대학이 금년 들어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한 내용을 대교협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보았다. 분석결과, 금년에만 거의 1천 건에 이르는 변경 사항이 존재하였으며, 심지어는 대교협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각 대학이 모집요강을 임의로 변경한 사례까지 발견이 되었다.

박홍근 국회의원실의 요청으로 대교협이 제출한 '2012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수정 대학 List' 자료를 분석해보면, 작년 말 대교협을 통해 각 대학의 2013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발표된 이후,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된 내용은 총 971건에 이른다. 971건의 변경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특히 수험생 입장에서 혼란과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는 전형방법의 변경 건수가 무려 333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형 자체가 통합되거나 신설·폐지된 경우도 158건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작년 말에 발표할 때는 학생생활기록부(40%)와 논술(60%)만으로 한 번에 합격자를 뽑겠다고 발표했다가, 뒤늦게 논술을 전형요소에 아예 제외하고 1단계는 학생부(100%)로 뽑고, 2단계에서는 학생부(30%)와 심층면접(70%)으로 선발하겠다고 모집요강을 바꾸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논술을 준비하면서 해당 대학 입시를 준비했던 수험생은 낭패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

<표 8>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세부 내용

모집인원		모집	명칭	지원	전형			전형	합계
증	감	시기	변경	자격	통합	신설	폐지	방법	
151	161	12	49	158	34	45	28	333	971

주1) 모집인원/모집시기/명칭변경/지원자격과 전형방법은 모두 변경이 되었을 경우 중복체크 될 수 있음
주2) 전형통합/신설/폐지로 인해 전형방법이 바뀐 경우는 전형방법에 중복체크 하지 않음

또한 변경된 내용을 각 대학의 대입전형시행계획이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2월과 3월에 변경이 된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수시1차 모집 시작을 불과 3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은 5월 이후 대입전형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도 283건에 이르렀다. 특히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혼란스러울 수 있는 전형방법 변경이 5월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가 무려 1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심지어는 대입전형을 대교협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한 사례도 있었다. 2013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서울대는 사범대학 일반전형에서 원래는 없었던 2단계 면접 및 구술시험을 심의 없이 추가하였으며, 연세대의 경우에는 학교생활우수자 전형에서 원래 서류를 100% 반영해 1단계로 전형을 한다고 발표하였지만, 이를 다시 3단계로 세분화하고 원래는 없었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새로 추가하기도 하였다.

나. 대입전형 운영과 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

전형의 복잡함과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대입제도와 관련된 문제이지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 대입전형에 대한 운영과 관리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계속될 뿐 아니라 심지어 악화되는 건 현재 대입운영 전반의 운영과 관리를 맡고 있는 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의 무능과 한계 때문이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때로는 대입전형 관련 정책을 충분한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갑작스럽게 도입·시행해온 교과부의 책임도 분명히 존재한다.

앞에서 지적한 전형 관련 문제 중, 논술과 구술면접시험 등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서 본고사 방식으로 출제하는 대학별고사의 문제나 개별 대학이 뒤늦게 전형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사례 등은 대교협과 교과부가 제대로 관리만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들이다. 또한 공인외국어인증시험 성적이나 경시대회 수상실적과 같은 서류 제출을 대학들이 요구하는 문제도 모든 전형에서는 아니어도 최소한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철저하게 막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런 사항들은 고등교육법시행령과 대입전형기본사항 등을 통해 이미 금지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는 대학이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초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

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규정(제31조)하고 있으며,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역시 명시(제35조 2항)하고 있다. 또한 대입전형기본사항에서는 본고사 방식의 출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는 각 대학의 대입전형기본사항 준수 의무를 규정(제33조 2항)하고 있다.

모집요강의 변경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입전형기본사항에 따르면 대입전형 시행계획(모집요강)은 사전 예고 이후 해당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사전 예고된 내용의 변경은 수험생 및 학부모의 예측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엄격히 진행되어야 하며 대입전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논술 등 대학별고사 시행 관련 규정이나 대입전형 변경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대입전형기본사항을 각 대학이 어겼을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해 교과부 장관은 해당 대학에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제60조 1항),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시행령 [별표 4]항의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1조 2항 관련)에 따라 제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상의 처벌까지 가능하게 되어있다(제64조).

하지만 대입전형 운영·관리의 책임이 있는 대교협은 버젓이 관련 법령과 대입전형기본사항을 어기는 대학들에 대해 전혀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며, 현 정부에서 대폭 확대된 대입자율화 기조 속에서 교과부도 사실상 이러한 문제를 그동안 방치해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대교협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논술 등과 관련하여 대교협은 제135차 이사회(2008. 2)를 통해 '대학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및 사교육비 증가 등의 우려를 감안하여 과거 국·영·수 중심의 지필고사와 같은 본고사 형태의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한다고 의결한 바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술고사의 지나치게 높은 난이도와 본고사 방식의 출제가 문제가 되자 2011년에도 '어려운 논술고사로 인해 수험생의 부담과 사교육의 증가가 우려돼 공교육의 범위 안에서 논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출제'하라고 대학들에 권고한 바 있다. 그렇지만 대교협의 이런 지침을 그동안 대학들은 철저하게 무시해왔다.

대입전형의 변경 등과 관련해서도 대교협은 금년 들어 대학의 모집요강 수시변경을 언론에서 문제 삼자, 보도자료(2012. 5)를 통하여 '대교협은 수험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과도한 전형 변경을 불허할 것이며,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에 안내하고 이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사례가 발생한다면 변경내용을 불문하고 추후 심의를 신청하더라도 불허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확인한 것처럼 5월 이후에도 전형방법을 비롯한 대학의 전형 변경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으며, 심지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전형을 변경한 사례(서울대, 연세대)가 분명하게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문제가 이렇게 악화된 데에는 근본적으로 교과부의 책임이 크다. 현 정부 들어서 대입자율화를 대폭 확대하면서 사실상 대입전형 운영과 관리에 대해 정부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스스로 던져버렸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이전 정부에서 철저하게 적용하던 '논술가이드라인'[8]을 폐지하면서 문제를 스스로 자초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대입자율화의 기조 속에서 논술 관련한 대학들의 잘못된 행태를 전혀 견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9].

매년 대학의 모집요강이 수시로 변경된 데에는 대학만이 아니라 교과부에도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현 정부 들어, 모집요강이 이미 발표된 이후에 대입전형 관련 주요 정책을 변경하는 사례가 매년 있었으며, 이런 교과부의 정책 변경은 각 대학이 이미 발표한 모집요강을 변경하도록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금년에 그 어느 때보다 변경 사항이 많았던 것도 교과부가 수시지원을 6회로 제한하는 정책을 2011년 12월 말에 갑작스럽게 발표하면서, 각 대학이 경쟁률 하락을 우려하여 경쟁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 수립에 돌입하고 다른 대학과의 눈치작전을 벌였기 때문이다. 이는 금년만의 현상이 아니다. 그동안 교과부가 매년마다 발표했던 '2012학년도 대입전형 간소화 등을 위한 주요 수정사항'(2011년 3월),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동 기준'(2010년 4월),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린다는 내용의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2009년 2월), '수능시험을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변경'(2008년 2월) 등의 정책은 각 대학으로 하여금 모집요강을 변경하도록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8) 2005년 8월에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논술이 본고사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조치로서, 단답형이나 암기된 지식을 묻는 문제, 수학과학과 관련된 풀이 및 정답을 묻는 문제, 외국어 제시문 등을 출제하지 못하도록 한 지침이다.

9) 금년 들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논술과 구술면접시험 문항분석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자, 비로소 교과부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그동안 꿈쩍도 하지 않던 대학들도 대학별고사의 난이도를 다소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의 완전한 개선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Ⅲ. 대입전형 단순화, 새로운 대입전형 공적 관리기구의 실행방안

가. 대입전형 단순화

대입전형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대입전형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대입전형은 모집시기(수시/정시), 전형의 대상(일반/특별)[10], 전형요소(수능/논술/학생부 등), 입학사정관 참여 여부(입학사정관/비입학사정관), 전형명칭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라 입학전형은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데, 예컨대 어느 대학의 한 입학전형은 수시에 모집을 하고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부를 주요한 전형요소로 삼아 입학사정관이 전형과정에 참여하는 전형(수시-일반-학생부 중심-입학사정관 전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전형은 각 대학이 임의로 명칭을 정하기에 따라서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게 된다.

<그림 2> 입학전형의 구분

모집 시기	전형대상	전형요소	입학사정관 전형과정 참여 여부	전형명칭
수시	일반전형	논술 중심	입학사정관 전형	○○○
		학생부 중심		△△△
		서류+면접 중심		□□□
정시	특별전형 (기회/지역균형 선발전형 등)	적성검사 중심	비입학사정관 전형	×××
		수능 중심		◎◎◎
				◇◇◇
				■■■
				☆☆☆

주) 정시에 모집하는 전형의 경우, 전형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른 전형요소보다는 대체로 수능 중심 전형으로 시행이 된다.

모집시기, 전형대상, 전형요소, 입학사정관 전형과정 참여 여부, 전형명칭 등 다양한 분류 기준 중에서 대입전형 단순화의 핵심은 전형요소와 전형명칭에 있다. 따라서 대입전

10)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며,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형 단순화 방안은 전형요소와 전형명칭을 어떻게 단순화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11].

그리고 전형요소와 전형명칭을 단순화하는 것에 덧붙여, 단순화된 전형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예고된 후, 최대한 변경이 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 입장에서 예측이 가능한 입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1) 전형요소 및 전형명칭의 단순화 방안

□ 전형요소 및 전형명칭 단순화의 주요 내용

대입전형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인 전형요소와 전형명칭 단순화 방안의 기본적인 방향은 수험생이 대비해야할 전형요소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전형요소와 전형명칭의 연계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나치게 많은 전형명칭의 개수와 모호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할 것은 전형요소의 부담을 줄인다는 의미가 단순히 전형요소의 가지 수를 줄이는 양(量)적인 접근도 있지만,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만으로는 대비할 수 없는 전형요소를 개선하는 질(質)적인 접근도 동시에 의미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전형명칭의 개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전형요소 및 전형명칭 단순화의 기본방향

□ 전형요소의 단순화
- 전형요소의 가지 수를 축소
-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만으로 대비가 어려운 전형요소 개선

□ 전형명칭의 단순화
- 전형명칭의 개수 축소
- 전형요소와 전형명칭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전형명칭의 모호함 해소

11) 이러한 전형의 분류기준에 비추어 볼 때,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대입전형 단순화 방안(△박근혜 후보 : 정시는 수능 중심, 수시는 내신 중심, △문재인 후보 : 수능, 내신, 특기적성, 기회균형, △안철수 후보 : 수능, 내신, 논술, 입학사정관)은 전형의 분류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단순화의 원칙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은 박근혜 후보는 논외로 하고 전형요소를 중심으로 단순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기회균형 전형(문재인 후보)이나 입학사정관 전형(안철수 후보)을 단순화된 대입전형의 한 유형으로 제시한 것은 대입전형의 분류기준에 대한 혼란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전형요소 및 전형명칭 단순화 방안의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활용하는 전형요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전형자료의 '생성'은 국가와 고교가, 대학은 자체적으로 전형자료를 생성하기 위한 별도의 다양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국가가 주관한 시험결과와 고교가 제공한 자료를 대학의 인재 선발 철학 및 기준에 비추어 '읽고 해석하여' 자율적으로 선발한다[12].

전형요소 및 전형명칭 단순화 방향과 대학이 활용하는 전형요소에 대한 원칙을 이와 같이 적용할 때, 단순화 방안의 핵심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논술과 적성검사는 전형요소에서 제외한다. 대학별로 실시하는 논술고사를 폐지하는 대신 내신 중심 전형을 통해 고교에서 3년 동안 시행한 논/서술형 평가 포트폴리오를 기초로 평가한다. 중장기적으로 3~5년의 경과 기간을 두고 고교 교육의 변화 정도에 따라 대학 공동 주관 또는 국가가 시행하는 논술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5조(입학전형자료) 개정, 관련 내용을 대입전형기본사항에 반영)

둘째, 대학별로 실시하는 면접고사 중, 교과지식을 물으며 사실상 본고사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는 구술면접시험을 폐지한다. 영어로 진행하는 면접과 입학사정관 전형을 중심으로 대학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다양한 평가(강의를 들은 후 리포트 제출, 실험보고서 작성, 주어진 과제에 대한 발표면접 등) 역시 실시하지 않는다. 면접고사는 일반 인성면접과 학생부, 자소서 및 추천서, 학생부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토대로 진행하는 심층면접 방식으로 통일한다. 심층면접에는 입학사정관이 참여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5조(입학전형자료) 개정, 관련 내용을 대입전형기본사항에 반영)

셋째, 학생부, 자소서 및 추천서,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을 증명·보완하는 서류 이외에 일체의 자료 제출을 금지한다. 단,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가 있는 내용(공인인증시험 성적, 교과 관련 교외 수상실적, 해외 봉사/체험활동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은 자소서나 추천서에도 마찬가지로 기록해선 안 된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5조(입학전형

12) 검정고시 출신자 등 고교에서 제공하는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수능 중심 전형으로 선발하거나 특별전형을 통해 독자적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할 수 있다.

자료) 개정, 관련 내용을 대입전형기본사항에 반영,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과부 훈령 제257호) 일부 개정)

넷째, 전형요소는 단순화하되 전형방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어떤 전형요소를 반영할 것이며 전형요소 간 반영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단계별 전형을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일괄합산 전형으로 운영할 것인지 등과 관련된 내용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판단한다. 단, 수시전형의 본래 취지[13]를 살리기 위하여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은 폐지한다.(⇒ 관련 내용을 대입전형기본사항에 반영)

다섯째, 전형별 모집인원 역시 대학이 정한다. 다만 대입전형이 고교-대학 연계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고교 교육의 건강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수능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5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점차 수시전형의 내신 중심 선발을 확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4].(⇒ 관련 내용을 대입전형기본사항에 반영)

여섯째, 전형의 명칭은 대학이 임의로 작명을 하지 않고, 전형요소와 전형명칭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전형요소를 그대로 전형명칭(예를 들어, 수능 중심 전형, 학생부 중심 전형 등)으로 사용한다.(⇒ 관련 내용을 대입전형기본사항에 반영)

□ 단순화된 전형의 실제 운영 : 수능 중심, 내신 중심, 특기적성 중심 전형

이와 같이 대입전형이 단순화되면, 각 대학의 대입전형은 주요 전형요소에 따라 수능 중심, 내신 중심, 특기적성 중심 전형으로 운영을 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13) 수시전형의 도입 취지는 점수 위주의 선발에서 벗어나 수험생의 시험 준비 부담을 줄여줌과 동시에 다양한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공교육의 정상화와 대학교육 적격자 선발에 기여한다는 것이었다.

14) 여기서는 일단 논의에서 빠졌지만,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여 전형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시와 정시로 모집시기가 나누어지면서,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겪는 혼란과 부담이 매우 큰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현행 11월에 치러지는 수능시험을 9~10월 정도로 앞당겨 시행한 후,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여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

<표 9> 단순화된 대입전형의 실제

모집시기	전형대상		전형요소	입학사정관 참여 여부
수시	일반전형		내신 중심	○
	특별전형	기회균형		
		지역균형		
		특기자	특기적성 중심	
		기타	-	
정시	일반전형		수능 중심	×
	특별전형	기회균형		○ 또는 ×
		지역균형		
		기타	-	

주) 특별전형(기타)의 전형요소는 전형의 성격에 따라 대학의 독자적 기준에 의해 선발할 수 있다. 단, 대학별고사 실시, 서류 제출 등과 관련된 내용은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수능 중심 전형

수능 중심 전형은 현재 정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능 전형 그대로이다. 수능성적 결과를 주된 전형요소로 활용되고, 학생부(주로 교과 성적)이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전형명칭은 각 대학이 임의로 명칭을 부여하지 않고 '수능 중심 전형'으로 통일한다. 다만 수능과 학생부를 반영하는 세부적인 방법은 대학마다 다를 수 있다.

■ 내신 중심 전형

내신 중심 전형은 학생부(교과, 비교과), 자소서 및 추천서,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을 증명·보완하는 서류를 토대로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심층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학생부 이외에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에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공인외국어성적, 경시대회 등 교과 관련 교외 수상실적, 해외 봉사·체험활동 등)는 배제된다. 심층면접 역시 대학마다 다양한 평가 방식을 추가로 개발하여 시행하지 않고, 입학사정관을 중심으로 제출된 서류를 심층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만 운영한다.

내신 중심 전형에서는 다른 스펙 자료가 전형요소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기존에 점수와 석차로 표시된 교과 성적 이외에 학생부를 비롯한 제출서류에 담긴 기록의 충실도와 신

뢰도, 그리고 이를 확인하는 입학사정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내신 중심 전형은 대학이 중점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세부적인 전형요소와 전형방법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명칭은 내신 중심 전형이라는 틀 속에서 중점적인 평가요소에 따라 다르게 부여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과 같이 아무런 연관이 없는 추상적인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중점적인 평가요소에 따라 명칭을 정해야 한다. 다음 <표 10>은 내신 중심 전형에서 시행될 수 있는 몇 가지 유형의 예이다.

<표 10> 내신 중심 전형의 유형 예시

구분	유형 및 전형명칭	주요 특징
내신 중심 전형	교과우수자 전형 (일반전형)	비교과 영역을 배제하고 기존 교과 성적(점수/석차등급)과 제출된 교과 관련 기록 및 자료(교과 담당 교사의 학생부와 추천서 기록, 자소서에 기록된 교과 관련 학습경험, 수행평가, 논·서술형 평가 자료 등)를 토대로 질적 평가와 과정 평가를 통해 학생의 역량과 열정, 잠재성, 전공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
	창의적체험활동 전형 (일반전형)	학생부, 자소서 및 추천서, 관련 제출 서류를 토대로 평가하되, 창의적체험활동 관련 부분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
	사회공헌·역경극복대상자 전형(특별전형)	학생부, 자소서 및 추천서, 관련 제출 서류를 토대로 평가하되,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공헌대상자, 역경극복대상자를 대상으로 전형을 시행하여 선발

주) 창의적체험활동 전형과 사회공헌·역경극복대상자 전형은 현재 경희대학교가 수시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전형임

■ 특기적성 중심 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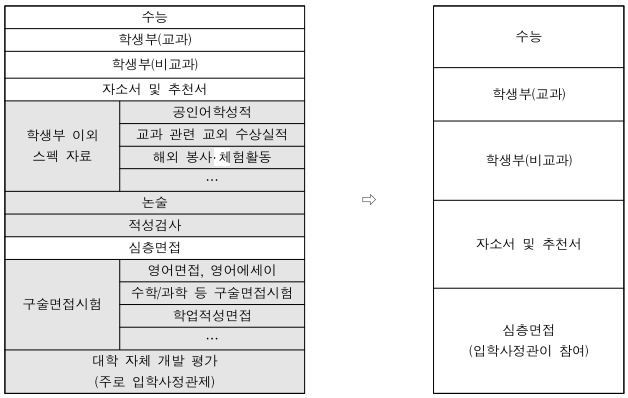
특기적성 중심 전형은 특별전형에서 분야별 또는 전공별 특기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전형이다. 전형요소는 내신 중심 전형과 동일하게 학생부(교과, 비교과), 자소서 및 추천서,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을 증명·보완하는 서류를 토대로 입학사정관이 참여(예체능 특기자 대상 전형은 제외)하여 선발한다. 다만 분야 또는 전공과 관련된 특기적성을 핵심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내신 중심 전형과는 달리 대학이 추구하는 전형의 성격에 따라 학생부의 교과 영역은 최소한으로만 반영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최근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비록 학생부의 성적은 낮지만 특정한 분야에서 아주 뛰어나거나 전공 관련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내 합격한 학생들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15].

□ 대입전형 단순화의 기대효과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입전형을 단순화하여 각 대학이 입학전형을 운영할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수험생의 준비 부담과 사교육 부담 감소, 학교교육의 긍정적 변화와 입학사정관제의 정착, 대학교육의 적격자 선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수험생이 준비해야할 전형요소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수험생의 준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전형요소를 단순화했을 때, 수험생이 대입전형을 위해 준비해야할 자료는 △수능 성적 결과, △학교생활기록부, △자소서 및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을 증명·보완하는 서류(학교에서 실시한 수행평가, 논/서술형평가, 동아리/봉사/체험활동 관련 자료 등)만이 남게 된다.

<그림 3> 대입전형 단순화에 따른 전형요소의 변화



※ 음영표시가 된 전형요소에서 제외

15) 최근 '내신 8등급 출신 곤충 박사'의 연세대 합격 사례나 몽골 지도의 표기를 일본해에서 동해로 바꾸어낸 학생이 건국대 정치외교학과에 합격한 사례 등이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대입전형 단순화를 위해 제외되는 전형요소에는 그동안 학교교육만으로 대비가 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논술, 구술면접시험, 공인외국어성적과 경시대회와 같은 수상실적 등 학생부 이외의 스펙자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형요소의 가지 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사교육 부담도 상당한 정도로 완화될 수 있다.

전형요소의 단순화와 함께 전형명칭의 단순화·명료화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입학전형 관련 컨설팅 사교육에 대한 수요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이다.

둘째, 학교교육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전체 모집인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내신 중심 전형에서는 고교에서 시행하는 내신을 평가하는 방법과 내용이 개선되고, 이를 토대로 학생에 대한 기록이 더 많이 보완되어 학생부를 비롯한 서류에 담기는 내용이 풍부해질수록 유리하다. 그리고 이는 비교과 영역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고교는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내신 중심 전형을 대비하기 위하여 학교의 수업과 평가, 학생부 기록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을 쏟게 될 것이다. 이는 고교의 교육이 수능시험에 맞춰진 문제풀이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확대된 교사의 수업과 평가 재량권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16].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좀 더 넓게는 단순히 고교뿐만 아니라 이전 단계인 중학교와 초등학교 교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전반적인 학교교육의 혁신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내신의 질과 신뢰도가 낮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원칙을 정하고 꾸준히 내신 중심 전형을 운영해간다면, 내신 중심 전형은 기존의 점수와 석차 위주의 학생부 중심 전형과는 질적으로 다른 매우 의미 있는 전형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다.

사실 이것이 입학사정관 제도를 도입한 애초의 취지이며, 도입 이후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입학사정관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 올바른 방향과 방법이기도 하다[17].

16) 교사의 수업과 평가 재량권 확대는 절대평가의 도입,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 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절대평가는 이미 도입이 시작된 상태이고,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최근 '고교학점제' 도입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17) 이와 관련하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현재의 학교생활기록부 명칭을 '학습성장기록부'로 바꾸고, 그 안에 학생에 대한 좀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과정과 질적 평가 결과를 기록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입학사정관 전형은 지나치게 '비교과/정규교육과정 이외/학교 밖 스펙'이 중심이 되고 있다. 물론 현실의 모든 입학사정관 전형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요소가 상당 부분 혼재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며, 일반 국민들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생각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입학사정관 전형의 평가 대상은 '비교과/정규교육과정 이외/학교 밖 스펙'에서 '교과/정규교육과정/학교 안에서 벌어진 활동' 중심으로 옮겨져야 한다[18]. 이런 방식으로 입학사정관 전형이 운영될 때, 마치 학교교육의 긍정적 변화와 입학사정관 전형의 정착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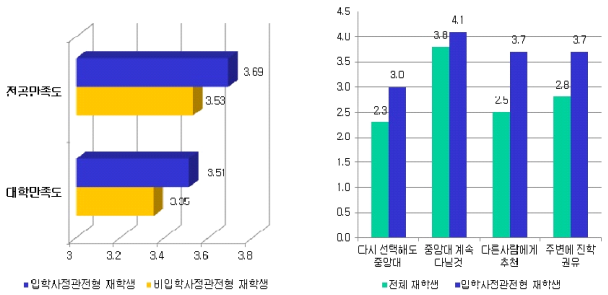
셋째, 이런 방식으로 대입전형을 단순화하는 것은 획일화와 완전히 구별되기 때문에 대학교육의 적격자 선발 관점에서도 지금보다 발전된 것이다. 기존 입학전형에서는 수능이나 내신 점수가 조금이라도 높은 학생,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어려운 논술 등 대학별고사의 성적을 기준으로 대학의 철학이나 모집단위(전공)의 특성과 무관하게 단순히 '성적우수자'를 선발해왔다. 하지만 대입전형이 제안한 바와 같이 단순화되면, 내신과 특기적성 중심의 입학사정관 전형이 제대로 정착되고 점차 비중을 늘려가면서 대학은 자신의 철학과 모집단위(전공)의 특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지금도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이 수능이나 논술 전형 등 다른 비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에 비하여 전공과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학과와 대학에 대한 충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가 이전 정부의 교육혁신위에서 처음 제안되었을 때,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체하는 '교육이력철'의 도입을 추진하였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입학사정관 전형이 애초의 도입 취지에서 벗어나 문제점과 부작용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출발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입학사정관제와 '교육이력철' 중에서, '교육이력철'의 문제의식은 삭제하고 입학사정관제만 도입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8)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입학사정관 제도를 비교과 활동을 중시하는 미국의 입학사정관 제도를 좇아가고 있는 기존의 입학사정관제와 차별화하여 '한국형 입학사정관 제도'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림 4> 2010학년도 신입생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건국대-左, 중앙대-右)



자료 : 입학사정관제 현황 및 과제(임진택, 2012)

2) 3년 예고제 도입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의 대입전형은 다양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모집요강 자체가 너무 늦게 확정·발표가 되고 그마저도 수시로 주요 사항이 바뀌면서 수험생과 학부모, 입시지도를 해야 하는 학교 교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기 위해서는 전형요소와 전형명칭을 단순화하는 것과 함께 대입전형기본사항과 대학별 모집요강의 발표 시기를 앞당기고 최대한 변경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이를 위해 대입전형기본사항은 지원자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해의 3월 이전(3년 예고제)에 발표하도록 하고, 각 대학의 모집요강은 같은 해 여름 방학이 끝날 무렵(2년 6개월 전)에 확정·발표하도록 한다. 물론 불가피한 경우 대입전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변경 심의 기준을 지금보다 강화하고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대입전형 관련 내용이 현재보다 앞당겨 발표되고 이후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 입장에서는 대입전형 정보에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진로와 특성을 고려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인 대입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대학입학전형계획의 수립 등) 개정, 대입전형기본사항에 반영)

나. (가칭)대입전형 공적 관리기구 구성

지금까지 제안한 대입전형 단순화 관련 대안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대학 일방에 맡겨져 있는 대입전형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책임 주체를 어떻게 새롭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현 정부 들어서 대입자율화가 확대되면서, 대입전형의 관리와 운영 책임은 사실상 대교협과 개별 대학에 맡겨졌다. 하지만 이는 대입전형이 대학만이 아니라 학생/학부모의 절실한 이해와 얽혀있으며, 대입전형에서 활용되는 자료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부와 수능성적 자료의 생성 주체가 고교와 정부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또한 대학이라는 이해당사자의 협의체 성격을 갖는 대교협이 대입전형을 관리하고 주체들 간의 갈등 상황을 조정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새로운 대입전형 관리와 운영 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이유이다.

따라서 대입전형의 관리와 운영 책임이 대교협과 개별 대학 일방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 학생/학부모·고교·정부 등 관련 주체가 균형적으로 참여하여 서로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를 기반으로 대입전형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대학과 정부가 대입전형의 권한을 가지고 핑퐁게임을 벌일 것이 아니라, 대입전형에 관계된 관련 주체들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령에 근거한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하여 대입전형 제도의 사회적 책무성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입학전형 공적 관리기구 구성을 위해 고등교육법 제34조의 4 신설)

Ⅳ. 대입전형 개선 중장기 방안

대입전형과 좀 더 큰 틀에서의 대입제도의 근본적인 변화의 방향은 질 높은 수업과 평가를 위한 선진내신제도의 틀을 정립하고, 대입전형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수능의 자격고사 전환(5등급 절대평가), △내신 중심 입학전형 전면화(학습성장기록부를 토대로 평가하는 '한국형 입학사정관 제도' 정착),

△대학 공동 주관 또는 국가가 시행하는 논술 도입 등이다.

가. 중장기 방안의 주요 내용

1) 수능의 자격고사 전환(5등급 절대평가)

점수 위주의 입학경쟁을 완화하고 학교교육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입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학교교육에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수능 시험을 애초의 도입 취지인 자격고사 성격의 시험으로 전환해야한다. 자격고사로의 전환은 학교가 수능 준비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업과 평가를 시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환경을 제공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쉬운 수능'의 기조는 이런 저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타당한 방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자격고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격고사 성격의 수능시험은 고교의 공통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하며, 평가는 절대평가 5등급 시험으로 실시한다.[19]

2) 내신 중심 입학전형 전면화

수능이 쉬워지고 대학별고사마저 금지된 상황에서, 그렇다면 '성적우수자' 변별이 아닌 교육적으로 타당한 진정한 의미의 변별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남는다.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결과에 따라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학생이 모집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내신에 대한 과정평가와 질적평가를 중심으로 입학사정을 한다(학습성장기록부를 토대로 평가하는 '한국형 입학사정관 제도'). 이때 평가는 정규수업과 평가의 결과가 기록된 학생부와 관련 제출 서류를 중심으로 하며, 점수와 등급에 드러나지 않은 이면을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하고 해석한다. 정규 수업과 평가 결과 이외에 비교과 영역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지만,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공인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교과 관련 교외 수상실적, 해외 봉사체험활동 등)은 반영하지 않는다.

19) 자격고사로 전환된 수능이 객관식 혹은 논서술형 방식의 시험 중 어떤 형태가 될 지에 대해서는 우선 객관식 시험으로 시행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판단하도록 한다.

3) 대학 공동 주관 또는 국가가 시행하는 논술 도입

고교 교육이 획일적인 문제풀이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논·서술형을 대비할 수 있는 수업과 평가로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 맞추어 대학이 공동으로 주관하거나 국가가 시행하는 과목별 논술 시험을 도입할 수 있다. 이는 자격고사로 전환된 수능과 별도로 시행되는 시험이며, 학생들이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전공)의 특성에 따라 지정된 과목에 선택적으로 응시하는 방식이다.

<표 11> 과목별 논술고사 시험체제 (예시)

교시	영역	출제범위
1	인문 선택교과	국어*, 화법, 작문, 독서, 문법, 문학,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도덕,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등
	수리 선택교과	수학*,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과 통계기본,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2	사회 선택교과	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 선택교과	과학*, 물리Ⅰ, 물리Ⅱ, 화학Ⅰ, 화학Ⅱ,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Ⅰ, 지구과학Ⅱ

주) 수험생은 1교시와 2교시에서 각각 한 과목씩 최대 2과목만 응시할 수 있음

과목별 논술시험은 도입 여부, 시기, 방식 등과 관련하여 학교 교육의 변화과정과 사교육 유발 영향 등에 대한 평가 속에서 추가로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고교의 수업과 평가,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기록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면, 굳이 전형자료를 위한 과목별 논술시험을 도입하기보다 대입에는 반영되지 않는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와 같은 위상으로 과목별 논술시험을 도입·시행할 수도 있다.

나. 중장기 방안 도입 로드맵

대입전형 단순화 방안을 우선 도입하여 2014년부터 향후 3년 정도를 운영한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수능 중장기 계획을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하여 확정 발표하여 고교와 대학, 그리고 수험생 등이 변화의 방향을 정

확하게 인식하고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기간 동안 대입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고교체제, 내신평가제도,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교육과정 운영의 혁신 등 관련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나가도록 한다.

<표 12> 대입전형 중장기 개선 방안 도입 로드맵

연도	정책 방향	주요 내용
2013년 말	새로운 대입제도 예고	• 수능 시행 계획 3년 전 예고
2014-2016년	현 대입제도 유지 및 운영 개선	• '쉬운 수능' 기조 유지 • 대학별고사 금지 • 모집단위/전공별 특성화 전형 실시 • 내신에 대한 과정 평가/질적 평가를 통한 입학전형 점진적 확대
2017-2020년	새로운 대입제도 시행	• 자격고사 수능 • 선진국형 내신 중심 선발 확대 • 대학 공동 또는 국가 주관 논술고사 도입

Ⅴ. 나오며

지금까지 최근 대입전형 개선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대입전형 단순화의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이를 책임지고 운영·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대입전형 공적 관리기구 구성을 위한 대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직까지 완벽할 수는 없으며 토론과 검증 과정을 통해 좀 더 정교화 되어야하겠지만 대입전형 단순화 등과 관련한 우리 사회의 논의와 대안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제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되고 토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안의 구체성과 정교함을 보강하고, 이러한 내용이 제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운동을 이후 펼쳐나갈 것이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제2발제

대입전형 단순화, 새로운 대입전형 공적 관리기구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김승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상임변호사)

전형요소를 비롯한 대입전형의 단순화, 대입전형계획 3년 예고제 도입, 대입전형 공적 관리기구의 구성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등교육법 개정

□ 가칭 '대학입학전형 공적 관리기구' 신설 (안 제34조의 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아닌 「대학입학전형 공적 관리기구법」에 의한 대학입학전형 공적 관리기구가 대학입학전형을 공동 관리함.

□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의 의무화 (안 제60조 및 제64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하여야 함(기속행위, 의무임).

2.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안 제32조)

대학입학전형 공적 관리기구는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관리 및 지원업무를 중심으로

대학의 영향평가 등 대학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전반적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정하여 공표하며 이는 입학연도의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3년 전까지 공표하여야 함(대입전형기본사항 3년 예고제).

□ 각 대학의 모집요강 2년 6개월 예고제 (안 제33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바탕으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 입학연도의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2년 6개월 전까지 공표하여야 하며,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대학별 논술 등 필답고사 폐지를 비롯한 입학전형자료 활용 제한 (안 제35조)

입학자 선발을 위한 입학전형자료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심층면접고사 등의 대학별고사의 성적, 그리고 기타 전형요소를 활용하는 경우 자기소개서, 추천서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을 증명·보완하는 서류만을 활용할 수 있음.

대학별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여서는 안 되고, 심층면접고사는 초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고 교과지식을 측정·평가하여서는 안 됨.

□ 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 신설 (안 제35조의2)

대학의 장이 령 제31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33조 제2항, 제35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의무가 있음.

3.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개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안 제35조의2에 따라 세부기준도 개정됨.

<고등교육법 개정 신구대조표>
(제34조의4 신설, 제60조 일부개정, 제64조 일부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의 4 (대학입학전형 공적 관리기구)[20] **대학의 학생선발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 공적 관리기구법」[21]에 따라 대학 입학전형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기구(이하 "대학입학전형 공적 관리기구"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제60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學事),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學事),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지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	**제6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지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인가나 제4조제3항에 따른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와 제57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입학을 허가한 자 2. 제35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2항 또는 제58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자 3.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이나 변경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62조제1항에 따른 학교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1.7.21.]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인가나 제4조제3항에 따른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와 제57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입학을 허가한 자 2. 제35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2항 또는 제58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자 3.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이나 변경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62조제1항에 따른 학교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1.7.21.]

20) 가칭

21) 대학입학전형 공적 관리기구법에 반영될 주요내용

① 대학입학전형 공적 관리기구는 대학의 장,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고등학교의 장, 고등학교 교사, 학부모 대표,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시민단체 추천자, 교육관련 법률전문가, 교육 관련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대학입학전형 공적 관리기구법」에 따른 대학입학전형 공적 관리기구는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관리 및 지원, 대학의 영향평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기타 대학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대학입학전형 공적 관리기구는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한다. ④ 대학입학전형 공적 관리기구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매 입학연도의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3년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신구대조표>

(령 제32조 개정, 제33조 개정, 제35조 개정, 제35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32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① 대학의 학생선발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학교협의체"라 한다)는 각각의 구성원이 대표로 있는 대학(이하 "회원대학"이라 한다) 간의 협의와 협조를 통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학교협의체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 입학연도의 전(前)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1] [본조제목개정 2008.6.11]	**제32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22]** **① 대학의 학생선발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 공적 관리기구법」에 따른 대학입학전형 공적 관리기구는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한다.[23]** **② 대학입학전형 공적 관리기구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매 입학연도의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3년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24]**
제33조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학교협의체가 제32조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하여 공표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1] [본조제목개정 2008.6.11.]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 입학연도의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2년 6개월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대학입학전형 공적 관리기구가 제32조에 따라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5조 (입학전형자료) ①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	**제35조 (입학전형자료)** ①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

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9.1]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8, 2001.1.29, 2008.2.29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6.11] ③ 삭제 [2008.6.11]	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심층면접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 **기타 전형요소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을 증명·보완하는 서류만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25] **② 제1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대학별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심층면접고사는 초·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하고 교과지식을 평가(측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의2(또는 제74조)[26]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1. 령 제 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학이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 초·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지 않은 경우**[27] **2. 령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매 입학연도의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2년 6개월 전까지 공표하지 않은 경우** **3. 령 제 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령 제35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하여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신설)**

22) 대학입학전형 공적 관리기구에서 정하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정할 주요 내용들
①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논술과 적성검사 전형은 폐지한다(령 제35조 제2항) ② 대학별로 실시하는 면접고사 중 교과지식을 물으며 사실상 본고사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는 구술면접시험을 폐지한다. 면접고사는 일반 인성면접과 학생부, 자소서 및 추천서, 학생부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토대로 진행하는 심층면접 방식으로 통일한다 ③ 학생부, 자소서 및 추천서,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을 증명·보완하는 서류 이외에 일체의 자료 제출을 금지한다. ④ 전형요소는 단순화하되 전형방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단 수시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은 폐지한다. ⑤ 전형별 모집인원 역시 대학이 정한다.
23) 현행법에서 대교협이 하고 있는 일
24) 모집요강 3년 예고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대학입학전형 공적 관리기구법 등에 명시함.
25) 단,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한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학 독자적기준을 바탕으로 별도의 지원 자격을 설정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정원 내)특별전형의 경우(예: 특기자 특별전형)를 고려하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9조 등의 개정을 통하여.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개정 신구대조표>

1. 일반기준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한 후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라. 대학 입학전형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1조 제1항**[28] **3)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매 입학연도의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2년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지 않은 경우** **4)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대학입학전형 공적관리기구가 수립하여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제34조를 위반하여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 **6) 제35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을 증명·보완하는 서류 외의 것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총 입학전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26) 신설
27) 일반적, 추상적인 규정이므로 시정변경 명령을 어떤 근거로 강제할 것인지 문제.

하는 경우 7) 제35조 제2항을 위반하여 대학별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거나 심층면접고사를 시행하면서 초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여 운영 또는 교과지식을 평가하는 경우		

28) 일반적, 추상적 규정 위반만으로 행정처분 내릴 수 있을지 문제.

▌제1논찬

대입전형 단순화와 새로운 대입전형 공적 관리기구의 구체적 대안 제안에 대한 토론

송선진 (교육과학기술부 대입제도과장)

제2논찬

대입전형 단순화에 대한 의견

박성열 (건국대학교 입학처장)

대입과 관련하여 최근의 키워드는 대입전형 단순화이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심지어 진로 담당 교사도 각 대학에서 시행하는 전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만큼 전형요소가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전형요소를 압축하면, 수능, 학생부, 논술, 특기(어학, 과학, 예체능 등), 그리고 입학사정관 등으로 줄어든다. 여기서 각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이 다르기 때문에 반영비율이나 적용방법 등이 틀려져 전형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가령 환경과 여건상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의 대학, 산학협력을 중점으로 하는 대학이 있고 각 대학마다 고유 건학과 교육의 이념이 있기 때문에 입학 정책과 기조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대입전형 단순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 각 대학마다 자체적으로 통합이 되었든 폐지가 되었든 아니면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 내든지 단순화는 이뤄질 것이다.

건국대학교인 경우에도 2014년에는 입학사정관 선도대학으로써 수행하는 자기추천전형과 전공적합전형이 통합되어 자기추천전형하나가 시행된다. 국제화 어학전형인 경우도 학생부중심과 면접 중심 두개 전형이 있지만 하나로 통합된다. 정시는 대부분 수능 점수만 반영하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수험생과 학부모는 사실 본인의 점수에 맞추어 대학과 학과 선택결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최근에는 각 대학들이 입학점수를 비공식적이나마 (입시설명회 등에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정보를 획득하는 차원에서 몇 년 전에 비해서 나아졌다고 볼 수 있다.

논술과 관련해서는 대학에서 과거 본고사와 비슷하게 어렵게 출제를 한다고 하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건국대학교는 언론에서 발표되었듯이 모든 지문을 고등학교 교과서에 출제한 최초의 대학으로써 고교교육연계와 사교육비 절감에 앞장을 섰다고 자부한다. 건국대학교는 논술을 가장 먼저 보는 대학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타 주요대학이 어쩔 수 없이 우리와 비슷한 형태로 갈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도 건국대학교는 논술의 주제는 고교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교과부의 방침과도 같이한

다. 입학처장으로써 가장 먼저 바꾼 것이 이것이다. 논술은 앞으로 이러한 방향과 기조가 유지되리라 본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도 논술(Essay)의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의 수시(early decision이나 early action)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참고로 미국의 Essay는 우리의 논술과는 다른 형태이다.

대학별 모집요강의 발표는 시기적으로 대학운영 및 경영에 있어서 최선의 시점과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시점을 잡고 있다. 보통 1년을 앞두고 (가령 2014를 금년 11월에 발표를 함) 큰 방향을 발표한다. 대부분의 대학이 이러한 시기는 잘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부분적으로 변경되는 각 대학마다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경우 일부 바뀌는 것이다. 이는 대학이라는 것이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 구조조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한다. 너무나 빠른 속도로 바뀌고 새로운 융·복합 학문이 생기고 블루오션을 창출해야 하는 학과도 생기기 때문이다.
대입전형공적 관리 기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고 본다.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용이하고 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자율적이고 다양성이 추구되는 시대적 상황에는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200년이 넘고 오늘의 대학의 표상을 정립한 미국의 경우에는 물론 우리의 현실과는 다르지만 자율이 강조된다. 따라서 적절한 중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학입시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대학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도 점차 선진국처럼 체계화가 되어갈 것이다. 오늘 이러한 토론회도 하나의 대학입시 선진화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좀 더 나은 대학입시제도가 정착되리라 조심스럽게 예단한다.

▌제3논찬

대입전형 단순화와 새로운 대입전형 공적 관리기구의 구체적 대안 제안에 대한 토론

임진택 (경희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

이렇게 광범위하고 분석적·체계적으로 연구한 논문을 읽을 기회를 준 발제자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발제자의 문제제기와 현황 및 문제점 진단 등 상황인식에는 대체로 동의하나, 대입전형 단순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다.

두 가지 가정을 해보자.

가정1. 고등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을 대학은 선발하여야 한다.
가정2. 창의인성교육에 기반한 고등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을 대학은 선발하여야 한다.

대입전형의 단순화 논의가 가정1에서 출발되어서는 안 된다. 단지 수험생과 학부모, 고등학교의 입시부담을 줄여주는 의미로 단순화를 말해서는 안 된다. 단순화의 방향은 미래 인재 육성과 관련해서 검토되어야 한다. 대입전형 단순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럼 대입전형의 목적은 어디에 둘 것인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는 "①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교육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고, ② 학생의 소질·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야 한다." 결국 ①항에서 대입전형의 목적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 초·중등교육이 교육본래의 목적이 따라 운영되도록 하는 것,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대학은 대입전형을 단순화할 것이냐 다양화할 것이냐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균등한 교육기회는 절대적 평등성이 아니라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 확보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수평적 형평성은 "동등한 여건에 있는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 하는 것이고, 수직적 형평성은 "대등하지 아니한 상황하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다르게 취급" 하는 원칙으로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동등하게 만들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판단의 기준이다. 개인적 입시 경험으로 보면 전형의 획일적 단순화보다는 다양화가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할 가능성이 크다. 고등교육법 제31조의 ②항에서도 그 수단을 다양한 방법과 기준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4조에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29] 구분도 대입전형의 다양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을 적용하는 일반전형 이외에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전형 설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음 표는 제17대 대통령선거(2007) 이명박 후보 공약으로 '대학관치 완전 철폐, 대입 자율화' 를 주장한 글이다.

○ **지난 30여 년 동안 교육당국은 획일적 평준화와 대학입시 개입으로 사교육을 잡고 입시부담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대학 경쟁력 약화와 사교육 팽창**으로 이어지고 있음.
- 지난 10여년 동안에도 정부는 좋은 대학을 만들기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입시정책에만 매달리면서 획일적 입시제도를 대학에 강제하기에 급급

○ 교육부는 **대학의 입시통제 수용 여부를 각종 지원과 인허가를 연동**시켰으며, 대학은 제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고 **교육부의 규제에 순응**해 왔음.
-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위한 좋은 교육과 산업계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각종 사업을 따내기 위하여 형식적인 보고서 제출에 급급한 특성화에 그치고 있어, 진정한 자율적 역량강화와 특성화가 늦어지고 있음.

두 번째 초·중등교육이 교육본래의 목적이 따라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대학은 전형요소 및 방법, 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①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②기초 능력의 바

29)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4조(입학전형의 구분) ①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②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③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④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으로 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를 그리고 있다. 이 인재는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가 「새로운 미래가 온다」에서 말한 하이컨셉·하이터치시대의 인재와 일치한다. 좌뇌(분석적 사고력)와 우뇌(정서 지능)를 융합할 수 있는 「창조와 공감, 그리고 소통의 인재」가 미래인재라는 것이다. 고등학교가 교육본래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면 결국 가정1과 가정2는 같아진다. 대입전형의 방향도 학교 중심의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또 고교도 창의인성교육 없는 학교생활 충실자 선발을 대학에 강요해서는 안 될 일이다. 대입전형의 단순화가 자칫 '고교교육과정의 단순화', '인재의 획일화' 를 말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대입전형의 단순화가 입학준비의 단순화를 부추겨 사교육을 조장할 가능성도 크다.

그러면 창의인성교육을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현재 대입에서 수능, 학생부, 논술, 면접, 실기고사, 서류 등이 전형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먼저 수능성적은 학업기초소양과 창의성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인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수능성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활동과 과정속의 창의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한의예과에 지원한 과학고(영재고) 학생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한다. 수능성적도 결국 창의성을 평가하는 수단 중 하나이지 유일한 잣대가 될 수 없다. 수능성적을 기존의 학력고사와 같이 촘촘히 줄 세우면 줄 세울수록 대입전형의 단순화는 가져다줄지 몰라도 고교의 창의인성교육과는 요원해질 것이다. 최근 교과부가 지향하는 '쉬운 수능' 은 창의인성교육을 대입전형 평가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학교와 학생활동의 기록물이다. 고교생활 중 창의인성교육을 확인하고 역량을 평가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어야 할 전형요소이다. 시험점수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자기주도 학습능력, 실험정신 및 탐구정신, 논리적 표현력 및 학업열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수능에서 확인할 수 없는 책임감, 준법성, 사회성 등 인성까지 어느 정도 평가 가능하다. 다만, 대학은 고교별로 창의인성교육의 차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역량을 또한 개별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논술, 면접, 실기고사 등은 창의인성교육을 평가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전공모집단위

에 따라서 실기고사는 창의성과 전공적성을 평가하는 가장 손쉬운 도구일 수 있다. 논술고사도 수능에서 볼 수 없는 창의적 사고력과 종합적 분석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이다. 다만 수능시험과 논술고사에서 모두 상당 부분 지원자의 지적 역량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한 전형에 두 전형요소 모두를 활용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면접평가는 인성을 평가하는 가장 좋은 전형요소이다. 수능을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하지 않는 전형에서는 인지적 영역과 비인지적(정의적) 영역 모두를 평가요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교과지식을 면접에서 배제해야한다는 발제자와는 의견을 달리한다. 현재와 같은 학생부 상대평가제 하에서는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학업기초 소양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서류평가는 학생부를 포함하여 자기소개서, 추천서, 기타 활동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창의인성교육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학교중심의 창의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입전형에 창의적 체험활동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창의인성교육이 학교가 중심이 되어야지 학생과 학부모에게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 대입전형에서 학교가 중심이 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발제자가 제시한 공인어학성적, 교외 수상실적 등 교외활동 실적을 평가에서 배제하고 학교 내(연계) 활동으로 평가대상을 삼는데 동의한다. 다만 전형자료를 학교 내 활동으로 제한하면, 고교 선택제가 아니라 배정제 하에서 고교 창의인성교육을 충실히 가르치지 않는 학교의 학생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창의인성교육을 학교 안에서 모두 시행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으로 학교가 학교 밖과 연계한 활동은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한다. 사교육을 차단하는 관점에서 교외활동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보다는 학교가 중심이 된 외부 연계활동은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발제가가 말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을 교내활동으로 너무 협소하게 제한하지는 말자는 의견에 동의한다.

그럼 수능도 쉽게 출제하고 논술고사와 학업적성면접도 폐지한다면 대학은 뭘 보고 선발해야 하나? 발제자는 내신중심전형을 제안하고 있다.[30] 내신중심전형의 전제조건은 학교중심의 창의인성교육 활성화이다. 고교의 창의인성교육 활성화가 기반 되지 않는

30) 학교생활기록부를 학습성장기록부로 변경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사회적 합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자주 변경하는 것은 또 다른 복잡성 중의 하나이다. 국민들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입시제도가 바뀐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이다. 또한 새로운 용어를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면 될 일이다. 내신중심전형이라는 표현에도 반대한다. 통상적으로 내신은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을 뜻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오히려 현재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습성장기록부로 교과 성적과 비교과활동을 아울러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상황에서 대입전형의 단순화는 또 다른 편법만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학생부 절대평가로 '평어'를 반영했을 당시 내신을 무력화했던 경험이 있지 않은가! 지금 대입전형에서도 학생부 교과 성적의 명목상 반영률과 실질반영률이 크게 다르지 않은가!

현재와 같이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나눠 선발하는 상황에서는 수시 학교생활중심, 정시 수능중심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 수능도 현재와 같이 9등급제를 유지하여 어느 정도의 변별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수시는 고교가 창의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제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대학이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다.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이 하나로 통합되는 상황에서는 수능을 자격고사화(5등급제)하고 학생부 성취평가제를 정착된 환경하에서 대입전형은 지원자의 교육환경과 학교생활(교과성적, 비교과성적)을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고려한 선발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발제자와 의견에 동의한다. 다만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수능 이외에 또 다른 국가시험인 논술고사를 도입하는 것은 반대한다. 수험생은 수능과 논술 두 국가시험에다가, 학교생활까지 충실히 해야 한다면 발제가 말한 '죽음의 트라이앵글'의 부활에 지나지 않는다. 고교 교육과정의 평가가객관식 시험만이 아니라 수행평가과정에서 그 해답을 찾을 일이다. EBS가 학교를 대체할 수 없는 이유, 즉 같은 교육과정 다른 강의야말로 학교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발제자가 제안한 예측불가능성은 대학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3년 예고제는 지켜져야 할 것이다. 정부 정책이 바뀌더라도 당장 내년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3년 후부터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어쩌면 대학이 바라는 바다.

새로운 법안으로 제시한 「대학입학전형 공적 관리기구 신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현재 대학입학전형은 한국대학교육협의법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위탁 수행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대입기본사항을 정하고 이를 대학들이 준수토록 하고 있다. 지키지 않을 경우 정원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동관리기구'라는 표현에 동의할 수 없다. '공동관리'라는 표현은 대입 전형을 공공성으로만 해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입전형을 공공성만으로 이해하는 시각은 모든 대학이 국립대학이 될 때 가능한 일로 본다. 대입전형에서는 대학의 '자율적 선발권'과 '사회적 책무성'이 균형 있게 보장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학생을 가르치고 육성해야 할 대학의 자율적 선발권은 당연하며 사회적 책무성도 일정 부분 따른다.

발제자가 지적하듯이 현재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면 기존 조직 관리책임을 강화하면 될 일이다.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고 해서 공공성, 사회적 책무성이 담보된다는 보장이 있을 수 없다. 여전히 교과부의 입학주무부서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관계처럼, 새로운 대학입학전형공동관리기구와 교과부의 입학주무부서와 관계가 크게 다르지 않을 듯하다. 이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도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그 구성원은 대학 총장, 시도교육감, 고등학교장, 학부모 등으로 한다. 대학입학전형공동관리기구에서도 대교협의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하여 그 외에 공무원으로 추천받은 자, 시민단체 추천자, 교육관련 법률전문가, 교육 관련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전문가를 추가하고 있다. 현재 대교협의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도 공동관리기구에서 포함하는 위원들을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어쩌면 제18대 대선후보가 공통으로 제안한 대입공통원서접수시스템 개발과 연계하여 기존 조직의 업무 확대나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겠다.

제4논찬

'대입전형 단순화, 새로운 대입전형 공적 관리기구가 대안이다' 발제에 대한 토론

이성권 (서울진학지도협의회 회장, 서울 대진고등학교 교사)

Ⅰ. 시작하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쌓아온 사회 각 분야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은 교육에 의해서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와 함께 세계사의 주역으로 성장해갈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입시정책에 대한 면밀한 고찰과 발전적인 대안의 제시는 현 시기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우리들의 아이들이 "역사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지낼 것인가? 아니면 사회의 주변인으로서 보잘 것 없이 지낼 것인가?"는 오로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와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학생을 위한 진학 · 진로지도는 교사가 수행해야하는 중요한 과업 중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교사의 또 다른 중요한 책무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대변하여 이를 입시정책의 논의와 입법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현장의 요구를 정책으로 실현하고 교육수요자의 권리를 생활 속에서 신장시키는 교육문화의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은 사회의 변화와 그 맥락을 함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정책의 운용 원리는 관주도의 중앙집권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방향과 목표를 정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결정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경우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입학 전형과 관련한 수많은 현장의 불만과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교육수요

자의 혼돈에 가까운 아우성을 해결해야하는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교육수요자의 목소리만 따라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은 교육이 특수한 영역이기에 그러한 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현재 보여 지고 있는 대입전형을 비롯한 중등교육의 정상화, 사교육의 억제, 중등교육과정의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고 하루빨리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는 올바른 민주 시민을 양성하고 나아가 세계를 이끄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해야 하는 책무를 게을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Ⅱ. 논의의 장

1. 대입전형의 단순화가 대안이다.

대학입학전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생부 교과, 비교과, 수능시험 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대학별고사를 여러 가지 형태로 실시하면서 대입전형의 골격이 유지되고 있다. 학생부 교과는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학업성취와 그 과정을 기록한 것으로 학생의 학교생활 충실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학생부 비교과는 정량화된 자료가 아니며 따라서 학생의 진로희망과 더불어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과정이 기록된 영역으로 잠재력과 소질, 적성 등의 정성적 평가가 가능한 영역이다.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과 독서기록, 세부능력특기사항, 종합의견란은 구체적인 자료를 기록하는 것으로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고안되어있다. 이 세 가지 기본 요소 중 학생부 교과는 수시모집에서, 수능은 정시모집에서, 비교과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서 그 요소가 충분히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시모집은 대학별고사와 수능의 요소를 대폭 줄이거나 폐지되어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위주로 개편되어야 하고, 정시모집은 수능 위주로 진행해야 한다. 현 입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비교과, 대학별고사, 수능 중 한 가지만 준비해서는 안 된다.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대학별고사(논술, 면접, 적성 등)를 모두 준비해야하며 수능까지도 대비해야 한다. 대입 전형이 복잡하고 세부 전형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는 구조이다. 당연히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학에서도 전형별 또는 세부 유형별로 적은 인원을 선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수시모집에서는 우선선발과 일반선발 등으로 수능최저학력기준 설정하고 있다. 일

반선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높은데도 우선선발은 일반선발에 비하여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선발과 우선선발 모두 수험생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야 단순 명료하게 입시가 진행될 수 있으며,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중상위권 대학들은 정시모집 뿐만 아니라 수시모집에서도 학생부 교과를 형식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중하위권 대학들조차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추세이다. 형식적으로 미미하게 학생부 교과가 반영되면서 대학별고사의 비중을 크게 높이고 있다. 대학별고사에 대한 준비는 학교,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느껴진다.

일선 고등학교는 전형별로 맞춤식 진학지도를 하고 있다. 학생들은 매년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사가 책임지고 입시 준비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전형이 복잡하게 되면 매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입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수능, 학생부 교과, 비교과라는 큰 틀 속에 진행되어야 한다. 수시모집인 경우, 수능최저학력 기준과 대학별고사를 폐지하거나 크게 축소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이래야만 3개 기본 요소 중 1개만 준비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1개만 전념해도 대학에 간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입학사정관제의 도입과 정착으로 인한 문제점이 없지는 않지만 고등학교 입학 시부터 자신의 진로를 모색하고 자신이 가지는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여 스스로 원하는 분야에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분위기와 대입으로 이어지는 제도를 구현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받을만 하다. 하지만 대학교마다 다양한 전형명과 각각의 인재상에 따른 선발기준이 다르고 전형요소 또한 각양각색이어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피로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오히려 주객이 전도된 느낌도 드는 것은 학생이 수행한 여러 과제와 경로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수단쯤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음을 확인하고서이다. 봉사활동과 각종 체험은 학생의 적성에 기반한 정상적이고 자발적 요구에 따른 활동과 성과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린 경우도 종종 본다.
이와 같이 고등학교에서는 전형요소가 너무 다양하여 1,2학년 때에는 이를 모두 준비해야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유발되는 긴장감과 학부모의 부담은 상상을 하기 힘들 정도이다. 따라서 전형요소를 간단히 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일부에서는 수시에서는 학생부, 정시에서는 수능만을 반영하여 대학입시를 치르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수시는 또 하나의 정시이며, 상당 시간 지속되는 수시 전형으로 인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은 물론 비정상적인 학교의 운영이 이미 예정된 것이다. 수시는 일 년 내내 상시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또는 소수민족 등 일부에게만 한정적으로 실시되어야하는 근본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입학사정관제, 대학별고사, 각종 실기고사 등으로 인해 수시 중심으로 입시의 지형이 바뀌고 있으며 이는 이미 지적한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2. 논술 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어야 한다.

논술고사를 통한 입학전형은 현재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총 27개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다. 논술은 주어진 제시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출제자의 요구에 따라 전개하는 요약적인 글쓰기이다. 이를 학교교육과정에서 과목을 개설하고 적극적으로 지도하면 단계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모든 과목의 교사가 지도하기는 쉽지 않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논술 연수를 실시하고 현직교사에게 논술 강사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교육과정 편성상의 과목제한 등 현실과 괴리되고 특히 최근의 경향인 통섭의 가능성까지도 없애버린 무책임한 학교운영 지침으로 인해 그 싹이 잘려나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은 사교육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교육비 부담은 증가하며 결국 논술이 대세인양 한지 몇 년이 되지 않아 도리어 논술고사를 정책적으로 축소하게 되는 자가당착을 범하게 된 것이다. 결국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학입시의 연계성을 무시한 엇박자가 가져온 혼선이라고 볼 수 있다.

<논술고사 실시 대학>

지역	대학명
서울 (21개대)	건국대, 경기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경기, 인천(7개대)	가톨릭대, 경기대, 경희대(국제), 단국대(죽전), 아주대, 인하대, 한국항공대
강원(1개대)	연세대(원주)

논술전형은 각 대학에서 대표적인 전형으로 모집인원이 가장 많고, 경쟁률이 가장 높은 전형이다. 때문에 학생들은 이를 무시하고 넘어가기도 쉽지 않다. 정시모집은 갈수록 줄어들고 수시모집은 갈수록 증가하는데 수시모집에서 적합한 전형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는 전형일 수밖에 없다. 대학에서는 논술 관련 자료를 탑재하거나 홍보 책자와 각종 설명회를 통해 그 준비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지만 학생은 어려움이 가시질 않는다. 정책적인 뒷받침이 사라진 상태에서 스스로 준비하게 된 구조적 원인에 대한 통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경우는 언제든 다시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할 때 면밀한 검토와 대처가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 수준의 정책이 상호 충돌하여 그 피해를 고스란히 수요자가 부담해야한다면 정책담당자는 그 폐해를 줄여서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이 수요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중시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충족되는 것이며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결국 고등학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되는 문제가 많아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고, 광범위한 부분에 대한 출제와 평가가 이루어지는 논술 전형이 지속되는 한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원래 기획했던 대로 교육과정상의 개설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하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내에서 정상적으로 준비하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학생의 사고력과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타당하다는 합의가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보완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을 증진하고 독서를 활성화 하는 등 부수적인 효과에 이르기까지 학교에서의 논술교육과 논술고사는 수정 보완 되는 것이 필요하다.

3. 입학사정관제를 보완한다.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이 모집단위별 특성에 따라 학생의 여러 가지 능력과 잠재력 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학생부 성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형자료를 심사하고, 잠재력, 소질, 전공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입학사정관전형은 학생부 교과와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가 이루어진다. 입학사정관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기도 한다. 이는 본래의 입학사정관제와는 거리가 있는 절차이다. 입학사정관제의 취지는 고교 현장에서 대부분 이해하고 있으며 대부분 공감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입학사정관제 내실화와 정착을 위해서 대학교에 거액을 지

원해왔지만, 일선 고등학교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열악한 고등학교 교육현실을 인정해야 하며,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대학교이지만 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고등학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고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자질과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고등학교에도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정부의 3단계 정책 방안을 살펴보면, 1단계로 2009년에 입학사정관제 내실화를 기하고, 2단계로 2010년과 2011년에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고, 3단계로 2012년에 입학사정관제 정착으로 되어있다. 완벽한 입학사정관제는 요원하다고 판단되어 대학의 특성 및 전형의 특성에 따른 한국형 입학사정관제를 예정했다 하더라도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이 수시모집에서 100%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선발하고, 주요 대학들이 수시모집에서 30% 내외를 선발하는 것은 분명히 빠른 진행이다.

<수시모집 입학사정관전형 비율>

구분	대학교	모집인원(명)	수시모집 인원 대비 비율(%)
2013학년도	125	43,337	19.1%
2012학년도	121	38,931	16.4%
2011학년도	117	32,916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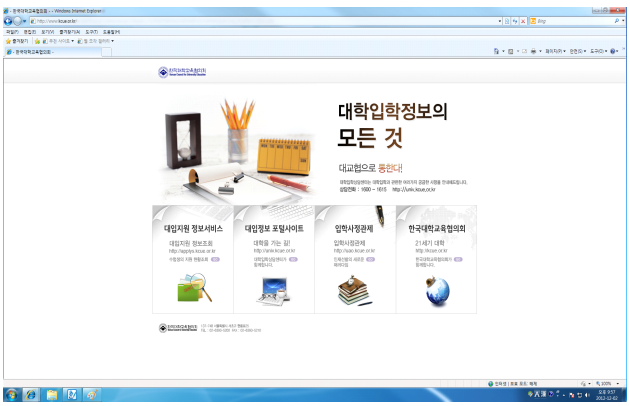
정부에서는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으로 공통 절차 및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여도 합격과 불합격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고, 지방과 도시 간의 불공정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아직도 자기소개서의 대필 의혹이 존재하고, 추천서는 형식적이고 볼 게 없는 게 대다수이다. 약 10% 정도만이 제대로 된 추천서라고 해서 추천서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고3담임이 추천서를 작성하는 분위기도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보완의 방법으로는 첫째, 대학에만 편중되어 있는 예산을 고등학교에도 지원하여 다양한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대학은 자율성이란 가치의 실현을 위해 나름대로의 다양한 전형방식을 고집하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재정구조를 가지는 고등학교는 대학이 원하는 방향으로 준비하여 합격을 시켜야 하는 비합리적인 구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비합리는 대학의 독특한 전형방식의 입시와 여기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양측의 공선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둘째로, 고등학교는 나름대로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편성하고(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을 갖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음; 특목고, 자사고, 자공고, 중점학

교 등) 이러한 과정에 대한 평가는 대학의 몫으로 돌리는 입시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대로 대학이 정해놓은 일정한 유형의 학생을 만들어 합격의 문양에 알맞도록 찍어내는 공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역시 교육수요자의 자율적인 성장과 고등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제약하는 구조를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셋째로, 추천서와 자기소개서 등 서류작성의 문제를 비롯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자기소개서는 공통양식으로 사용하면 학생의 부담이 줄고 추천서의 경우도 학교생활기록부상에 기록된 다양한 교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갈음하면 좋을 것이다. 세부능력특기사항, 봉사활동 특기사항, 진로활동 특기사항, 종합의견 등을 참고하면 추천서에서 볼 수 있는 정보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실 있는 기록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동시에 얻게 되고 이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와 같이 몇 가지의 방법으로 입학사정관제를 보완한다면 이미 정착된 진로교육의 강화를 위해 쏟아 부은 예산의 현실적합도를 제고함은 물론 학교교육의 정상화(진로, 인성, 생활, 학업지도의 병행)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4. 대교협의 역할

<대교협 홈페이지 초기화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육성하여 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2.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3. 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4. 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5. 대학의 평가
6. 대학 교직원의 연수
7.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8. 그 밖에 대학 간의 협동에 관한 업무의 시행
② 협의회는 대학교육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교협은 대학교육의 내실화와 대학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법령에 근거하여 법인의 형태로 운영되는 공익 법인이다. 그런데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대입전형의 업무에 너무 치우쳐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대학입학정보박람회, 대학입학정보, 진로진학정보 등이 주요 메뉴이며 대입전형지원실에는 입학기획팀, 입학지원팀, 대입상담센터 등이 있으며 여기에서 대학의 입학전형과 관련한 대부분의 방향설정과 규제(?)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찌 보면 대학의 입학과 관련한 정책은 교과부와 대교협이 담당한다고 해도 이를 준비하고 학생을 상담하며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고등학교 교사의 몫으로 남겨 놓아야한다. 하지만 대교협 상담교사단을 조직하여 고등학교 교사를 마치 하부조직인양 조직하여 그들을 교육하고, 고등학교 입시설명회를 주관하며, 입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자료를 생산하는 등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대교협이 수행해야 할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서울진학지도협의회와 같은 자생적이고 봉사적인 자발적결사체가 건강하게 활동할 공간을 차지하고 군림하는 형상이다. 최근에는 모든 대학원서접수를 대행하는 사업을 시작 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또한 대교협의 고유의 업무와는 거리가 먼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방향으로의 진행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Ⅲ. 결론을 대신하여
('대입전형 공적 관리기구' 설치에 관하여)

이러한 논의를 종합할 때 복잡하게 얽힌 입시를 둘러싼 문제의 해결은 거시적으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맞닿아 있으며 미시적으로는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반영한 정책입안의 절실함과 맥락을 함께한다. 입시와 대입전형을 둘러싼 모든 문제의 해결이 '대입전형공적 관리기구의 설치를 통해 모두 이루어 질 수는 없을 지라도 해결의 실마리를 어디에서 찾을까에 관한 답은 충분히 모색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현재로서는 발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입법을 통해서 '대입전형공적 관리기구'를 설치하고 정책입안 실무담당자, 대입과 관련한 대학교 관계자, 현장의 교사, 교육수요자인 학부모가 함께 모여 문제를 논의하고 예상되는 폐해를 최소화 하면서 대입정책의 방향을 다함께 모색하는 것은 현 시기에 매우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미 밝힌 것처럼 우리 시대가 교육수요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는 시대적 당위성을 근거로 할 때 지금까지의 공급자 위주의 정책결정 구조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계기로 삼는 것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제5논찬

대입전형 단순화와 새로운 대입전형 공적 관리기구의 구체적 대안 제안에 대한 토론

이 범 (서울교육청 전 정책보좌관, 교육평론가)